

# ‘대통령실 이전 예산’ 삭감 vs 복구... 불 붙은 예산전쟁

### 10개 상임위 예비심사 완료...경찰국 4억·이상민 업추비 1억 등 삭감 민주, 다가구매입임대 등 10대 사업 증액 추진...국힘 “삭감 예산 복구”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 전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되면서 관련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의 ‘전면 삭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반발하며 원상 복구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간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총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산업통상

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는 전날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 (6억원), ‘청와대 활용 K-뮤직확산’ (6억원), ‘청와대 사량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 (40억원),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 (7억5000만원) 등 59억50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예산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 (29억6만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 예결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예산 (경비 2억90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 전액을 깎았다.

사퇴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등을 포함하면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예산의 총 삭감 규모는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대신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관련 예산 약 5조4946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다가구매입임대(2조5723억)·전세임대용자(1조208억)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예산과 국회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

여가위에서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12억3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예산(92억9100만원) 증액 등 민주당 주장이 반영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외교통일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의 영빈관 설치 예산(21억7400만원)을 삭감했지만, 뒤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이 의결을 유보하면서 외교부 원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 국방위·농해수위·복지위 소관 부처 감액 심사에 착수하면서 여야간 예산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역화폐 지원정책, 소비 진작에 큰 도움”

### 민주, 예산 확보 간담회...중소상공인살리기협 “예산 늘려 민생 살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000억 원을 원상 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부 정책이고,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는다”며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중물로(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을 내놓으면, 30조원이 판매될 경우 3조원을 다시 부가세로 기획재정부가 걷어가는 남는 장사”라며 “마중물도 안 내놓고 돈을 걷어가겠다고, 내놓을 수 있게 예산을 꼭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중소기업살리기협회장은 “지역화폐 예산이 여야 정책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액 삭감은 일도당도않은 말이다. 되려 예산을 더 늘려 여야가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여의도 브리핑

### “이태원 참사 당일 불법 주정차 절반 계도 조치뿐”

#### 김희재 의원, 용산구청 자료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이태원로 불법주정차 신고 절반이 경고장 혹은 계도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시간 이후 신고도 모두 계도처리됐다. 용산구청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김희재(여수시) 국회의원이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있던 지난 10월 29일 용산구청에는 72건(중복포함)의 이태원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고장 발부와 계도 조치만 이뤄진 경우는 40건(중복포함)으로 전체의 55.5%에 달했다. 차량이동이나 견인조치는 14건(중복포함 19.4%)에 불과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턴호텔과 폴

리텍 양방향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차량의 경우 경고장 발부에 그쳤다.

또 참사 발생 이후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차량이동이나 견인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밤 10시 43분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로 218, 이어 10시 58분 이태원로 222 등 이태원로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16건이나 있었지만 모두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

김희재 의원은 “참사 현장을 점검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용산구청장의 거짓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면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도, 자책하고 있는 현장 경찰과 소방관들이 아닌 이런 무책임한 책임자들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검찰 정진상 수사,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

###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여부 늦은 저녁 결정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에 이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사전 구속영장 청구)이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을 두고 여야는 17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론’을 재점화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일련의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사법권정”이라면서 “민주당 전체의 방한도 진실의 몸통을 감출 수 없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실에 대해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미에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한용 의회 독재”라는 전 대미문의 정당사를 써가는 민주당의 폭주는 놀랍

다”면서 “이 대표 복심인 정진상씨가 민주당과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혐의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를 향해 “남의 슬픔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륜적 정치 그만하길 바란다”며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셨던 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병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고, 검찰은 무조건 사법처리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가 궁극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며 “이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은 과거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장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정보가 적시됐다”면서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2시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선 법원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18일 저녁, 늦어도 19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임산부 배려 캠페인**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다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로 구분이 잘 안되는 임신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보건복지부 | 광주광역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합계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